Ⅵ-5 쉽고 빠른 규제개혁 원스톱 서비스

추진부서 (사업주체)	기획예산실 (고창군)	팀장	강윤희 (2235)	담당자	허미정 (2235)	추진율	전체대비	23년대비
							100%	100%

구 분	연도별 목표	세부 추진실적
2023	◦ 규제개혁 지속 발굴	◦ 허가팀 신설로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운영 ◦ 쉽고 빠른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운영 – 온 라 인 : 홈페이지 원클릭 인포존(배너) 설치 완료 – 오프라인 : 상시 창구 운영(대외협력팀)/2023. 1월 창구개설 ◦ 규제혁신 TF팀·규제개혁위원회 운영(3회)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2개소) ◦ 타 지자체의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통영,합천) ◦ 월 1회 규제혁신의 날 운영 및 규제 발굴 ◦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개선 건의(24건)

Ⅰ 사업개요

○ 기 간 : 2022 ~ 계속

○ 대 상 : 군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 등

○ 내 용

- 허가팀 신설로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운영 및 절차 간소화
- 주민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하는 행정규제 심사강화 및 정비
- 지역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발굴 및 경제분야 규제 중점 개혁

Ⅱ 지금까지 추진상황

○ 종합민원실 허가팀 신설 및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추진

○ 쉽고 빠른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창구 개설 및 운영

- 오프라인 : 상시 창구 운영(대외협력팀) / 1월 창구개설
- 온 라 인 : 홈페이지 원클릭 인포존(배너) 설치 완료
  · 지방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신고센터, 규제개혁신문고, 규제입증책임제

○ 타 지자체의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통영, 합천) ···· 2023. 03.
○ 고창군 지방규제혁신 TF회의(2회) ····· 2023. 03.
○ 고창군 지방규제혁신 간담회 개최(1회) ····· 2023. 05.
○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2개소) ····· 2023. 11.
○ 조례 규칙 제·개정 시 행정규제 사전심사(85건) ····· 연 중
○ 월 1회 규제혁신의 날 운영 및 규제 발굴 ····· 연 중
○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개선 건의 ····· 연 중
- 불합리한 덩어리규제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11건)
- 자체 발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12건)

Ⅲ 향후 추진계획

○ 종합민원실 허가팀 운영 및 인·허가 원스톱서비스 ····· 연 중
○ 월 1회 규제혁신의 날 운영 ····· 매월 25일
- (주요발굴분야)
· 도시거주 은퇴자, 베이비 부머 등 대상 인구감소지역 유입 촉진을 위한 법, 제도
·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사항에 미반영된 사항 및 규제사항
· 탄소 중립/바이오 관련 규제사항(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
· 군정 현안 중심 규제, 그림자·행태규제 등
○ 쉽고 빠른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운영 ····· 연 중
○ 규제개혁 발굴 접수 및 개선 ····· 연 중
- 법령, 제도 : 소관 중앙부처, 규제개혁 신문고 등 규제과제 개선 건의
- 자치 법규 : 군 자체 규제과제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협의 후 자치법규 개선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창구 : 오프라인(기획예산실 대외협력팀)

–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창구 : 온라인(홈페이지 원클릭 배너 설치)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창구 : 온라인(홈페이지 인포존)

–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 창구 : 온라인(홈페이지 인포존)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타 지자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자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결과보고

Ⅰ 출장개요

1. 일　　시: 2023. 3. 21.(화) ~ 3. 22.(수)
2. 장　　소: 경상남도 통영시, 합천군 일원
3. 내　　용: 지자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4. 세부내용: 경상남도 통영시청과 합천군청을 방문하여 규제개선 우수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군정에 접목 시키기 위하여 벤치마킹 및 아이디어 발굴
5. 출 장 자 : 3명 / 대외협력팀장 외 2명

Ⅱ 세부내용

1. **(통영시) 택시복합할증제 해제 및 비대면 택시요금결제시스템 도입**

- 택시요금을 둘러싼 25년의 주민 불만, 승객-기사 분쟁 일거 해소

☞ 시민의 이동편의, 요금부담해소를 위해 시민·종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2019년 7월 부분적으로 시행, 2020년 12월에는 관내 모든 택시가 동참하여 **전국 최초로 도농복합통합시 복합할증제를 전면해제 및 통영시 전역 동일요금제도 도입**. 또한 통영시는 전국 최초 자체 온정택시앱을 구축하여 제로페이 및 모바일지역상품권을 연동시켜 언택트로 결제 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같이 통영시의 규제발굴 노하우와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군 실정에 맞춰 반영 노력.

2. **(합천군) 굴곡형 안전표지판으로 보행자 이동편의 향상**

- 보행장애 유발하는 수직 돌출형 표지판을 굴곡형 표지판으로 교체

☞ 고질적인 문제였던 표지판 돌출로 인한 파손 및 차량 추돌과 보행장애를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을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해석해 표지판의 기둥을 보도쪽으로 휘게하여 돌출을 없애고 표지판 위치도 높여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한 교통표지판을 자체 구상·제작**. 특히 표지판 뒷면에 군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넣어 홍보 및 군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함. 고창군도 합천군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 방안 마련.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타 지자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Ⅲ 사진대지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법무규제개혁팀 방문

합천군청 기획예산실 법무규제팀 방문

(앞쪽) 합천군 굴곡형 안전표지판 우수사례 (뒷쪽)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지방규제혁신 TF회의(1회)

2023년 제1회 지방규제혁신 TF팀 회의 개최 계획

1 개 요

■ 개최일시 : 2023. 3. 6.(월) 14:00 ~

■ 심 의 : 발굴과제 의견수렴, 보완 등

■ 위 원 : 지방규제혁신 TF팀

- 팀 장 : 부군수
- 총 괄 : 기획예산실장
- 기업·소상공인 경제분야 : 신활력경제정책관
- 인허가분야 : 종합민원실장, 농업정책과장, 건설도시과장
- 환경, 보건 분야 : 환경위생과장, 축산과장, 보건행정과장

■ 안 건 : 규제혁신의 날 운영 발굴과제 5건

- 인구감소지역 투자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례
-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 주거용 주택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반입장비(철거)시 현행 해체계획서 건축사·기술사검토 의무 면제(완화)
- 전기사업법 개정
-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기준 완화

■ 추후계획 : 관계부서, 중앙부처 건의 등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지방규제혁신 TF회의(1회)

- 규제혁신의 날 운영 과제발굴사항-
지방규제혁신 TF팀 회의 개최 안건

발굴분야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입장에서 지역의 활력제고와 인구의 유입촉진 등 각 부처의 개별 정책기준, 규정, 법령의 개선·합리화가 필요시 되는 사항

- 인구성장기 제정된 정책기준(인원수,연령,거리제한 등) 및 제도개선
- 도시거주은퇴자,베이비부머 등 인구감소지역 유입촉진을 위한 법,제도 건의
-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사항에 미반영된 사항 및 규제사항 등

개선 과제 발굴 : 5건

발 굴 자			과제 또는 사례명
부서명	직급	성명	
기획예산실	행정6급	최충만	인구감소지역 투자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특례
기획예산실	행정8급	신동철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 주거용 주택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종합민원실	행정8급	정승경	빈집 정비(철거)시 현행 해체계획서 건축사·기술사검토 의무 면제(완화)
신활력경제 정책관	행정8급	김원구	전기사업법 개정
재무과	세무8급	한주희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기준 완화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지방규제혁신 TF회의(2회)

2023년 제2회 지방규제혁신 TF팀 회의 개최 계획

1 개 요

■ 개최일시 : 2023. 3. 31.(금) 10:00 ~

■ 심 의 : 발굴과제 의견수렴, 보완 등

■ 위 원 : 지방규제혁신 TF팀

- 팀 장 : 부군수
- 총 괄 : 기획예산실장
- 기업·소상공인 경제분야 : 신활력경제정책관
- 인허가분야 : 종합민원실장, 농업정책과장, 건설도시과장
- 환경, 보건 분야 : 환경위생과장, 축산과장, 보건행정과장

■ 안 건 : 규제혁신의 날 운영 발굴과제 2건

-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등 설치 허용
-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 가능

■ 추후계획 : 관계부서, 중앙부처 건의 등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지방규제혁신 TF회의(2회)

- 규제혁신의 날 운영 과제발굴사항-
지방규제혁신 TF팀 회의 개최 안건

발굴분야

■ 인구감소지역 지차체입장에서 지역의 활력제고와 인구의 유입촉진 등 각 부처의 개별 정책기준, 규정, 법령의 개선·합리화가 필요시 되는 사항

- 인구성장기 제정된 정책기준(인원수,연령,거리제한 등) 및 제도개선
- 도시거주은퇴자,베이비부머 등 인구감소지역 유입촉진을 위한 법,제도 건의
-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사항에 미반영된 사항 및 규제사항 등

개선 과제 발굴 : 2건

발 굴 자			과제 또는 사례명
부서명	직급	성명	
기획예산실	행정8급	신동철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등 설치 허용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8급	김서영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 가능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매월 규제혁신의 날 운영

고 창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월 중 고창군 규제혁신의 날」 운영에 따른 과제 발굴·제출(부서별 1건 이상)

1. 기획예산실-1742(2023.2.8.)호에 의거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기업규제 등 개선으로 군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월 「규제혁신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의 날, 규제개혁신고센터 과제 발굴	⇨	규제개혁위원회, 지방규제혁신TF팀 연계, 검토	⇨	규제혁신 (중앙부처 건의, 개선 자치법규 정비 등)

(주요 발굴 분야)
- 인구성장기 제정된 정책지군(인원수, 연령, 거리제한 등) 및 제도개선
  * 농촌·농업, 복지의료, 일자리산업, 주거정주기반, 교통생활권의 분야 등
- 도시거주 은퇴자, 베이비부머 등 대상 인구감소지역 유입 촉진을 위한 법, 제도
-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사항에 미반영된 사항 및 규제사항
- 탄소중립/바이오 관련 규제사항(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 - 전북 중점분야
-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사항 등

2. 이와 관련 **부서별 1건 이상** 과제를 발굴하여 **11. 14.(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 또는 메일(온나라메일, syeee888@korea.kr)

붙임 1. 규제애로 개선건의 제출서식 1부.
2. 중앙부처 규제 및 그림자 행태 규제개선 제출서식 1부. 끝.

고 창 군 수

수신자 노. 도. 로

기획예산실
주무관 이슬이 대외협력팀장 강윤희 기획예산실장 이성수 전결 2023. 11. 3.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실-14829 접수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매월 규제혁신의 날 운영

양식 농업 보조사업 신청 간소화 규제 개선(신규)

□ 과제명 : 농업 보조사업 신청 및 절차 간소화 행정서비스

□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규제현황) 보조사업 신청시 견적서 등 **다양한 서류구비** 필요

- 보조사업 신청시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포기각서 등의 서류 제출에 따른 신청하는데 많은 시간 소모

○ (문제점) 사업신청시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서류를 징구함으로서 신청인들의 피로 누적

- 기존에는 견적서 등의 서류를 갖추기 위해 업체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소모로 신청인들의 불편 및 불만 초래

□ 개선내용

○ 농업 보조사업 신청 및 절차 간소화 행정서비스 제도 마련

- 민원인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만 제출
  ※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 행정정보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자체 확인 및 첨부

<개정 前>		<개정 後>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견적서, 사업계획서, 포기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증서류(해당사업), 소득금액증명서(해당사업) 등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 견적서, 통장사본**

□ 기대효과

○ 농업 보조사업에 대해 신청방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줄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 기존에는 모든 신청인들에게 견적서 등의 서류를 징구함으로서 신청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소모 등이 있었으나 사업확정된 농업인에게만 필요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불만 감소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출장결과보고서(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1. 일　　시 : 2023. 11. 10.(금)
2. 장　　소 : 고창 아산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2개소

연 번	업 체 명	방문일시	대표자	주소
1	농업회사법인 청맥(주)	2023.11.10. 10:00	김채주	고창군 아산면 아산농공단지길 25-10
2	(유)목인	2023.11.10. 11:00	두강만	고창군 아산면 아산농공단지길 49

3. 출 장 자 : 3명(기획예산실 이슬이 주무관 등 3명)
4. 내　　용 : 하반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기업 애로사항 및 규제건의 청취 등
5. 건의내용

① 농업회사법인 청맥(주)
- 중소기업 지원 시에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대출 갱신 등의 경우에도 이차보전 지원필요
- 농업관련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신제품 판로확보를 위한 홈쇼핑 커머스 등 유통관련 컨설팅 및 인력지원 필요
- 1기업 1공무원제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공유될 수 있는 간담회 자리 마련 요망

② (유)목인
-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이자 부담이 큼
- 과도한 환경 관련 규제로 기업에서 불필요한 제재를 받는 경우가 없어 주기적으로 기업 실태 파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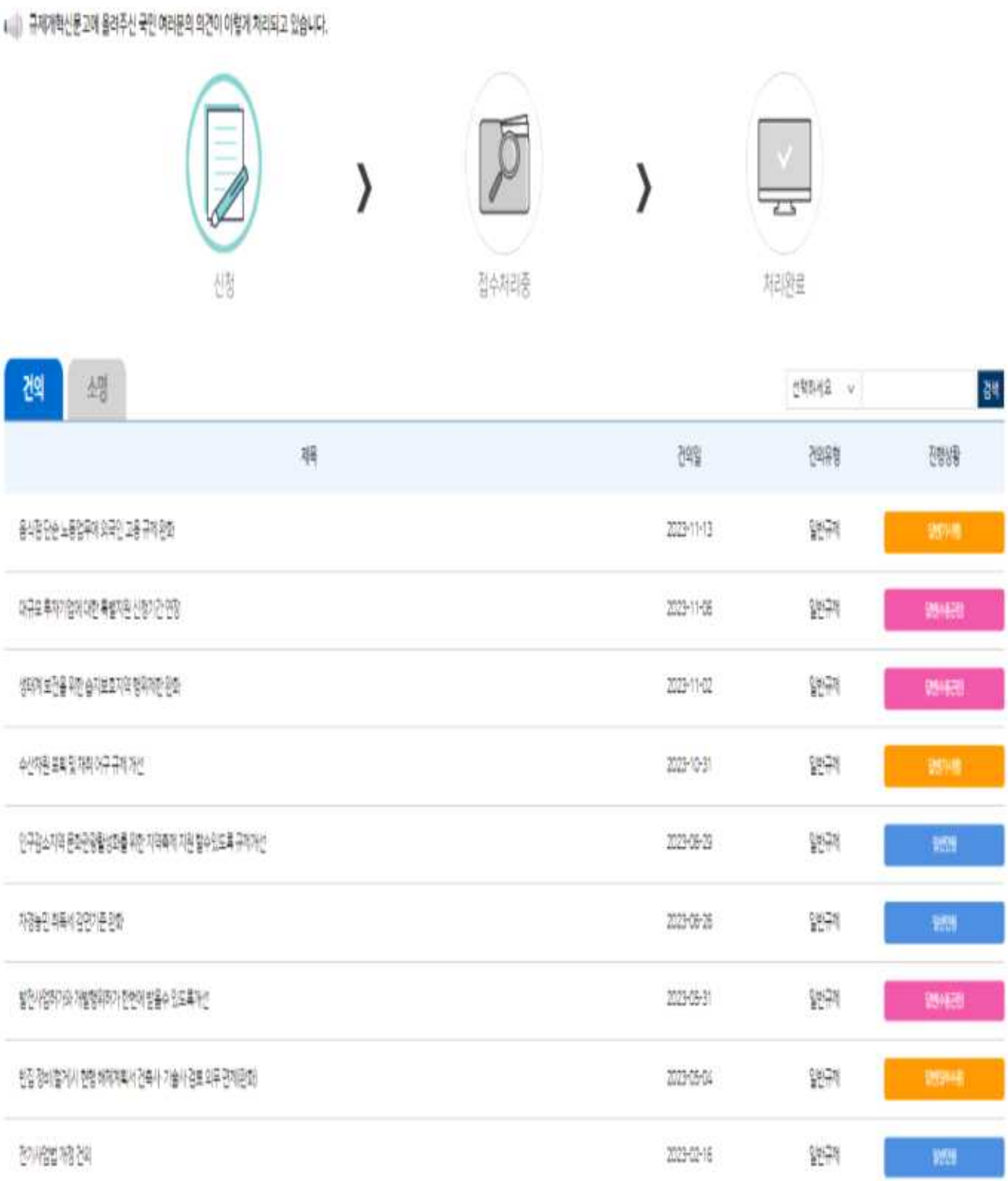
6. 사진

농업회사법인 청맥(주)

(유) 목인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덩어리규제 규제개선 건의(규제개혁신문고)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덩어리규제 규제개선 건의(중앙부처)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고 창 군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규제혁신과장)
(경유)
제목 중앙규제 개선 건의(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사용기준 완화)

법령 등에 따른 중앙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자 발굴 과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수용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사용기준 완화 1부. 끝.

고 창 군 수

기획예산실 [redacted] 대외협력실장 [redacted] 기획예산실장 [redacted] 전결 2023. 11. 30.
주무관 [redacted]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실-[illegible] 접수
우 56429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기획예산실 / www.gochang.go.kr
전화번호 063-560-2245 팩스번호 063-560-2259 / [illegible] / 비공개(1)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덩어리규제 규제개선 건의(중앙부처)

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사용기준 완화

부서명	건의자	사무실번호
농업정책과	고성열	063-560-2526

□ 현 황

○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하거나, 기존 사용 통장의 잔고가 0원인 통장을 보조금 통장으로 교부신청 시 제출

□ 문 제 점

○ 보조사업자들이 기존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지만 현재는 국민 대부분이 모바일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 통장사용이 줄어들고 있음

○ 금융법 강화로 신규통장 개설이 어려워 보조금만을 별도로 관리할 통장을 신규로 만들기가 어렵고 금융관련 업무에 미숙한 고령층의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진행에 다수의 보조사업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음

□ 개선내용

○ 1회 이체 거래로 보조사업이 완료되는 경우는 기존 사용하던 통장을 사용하여 1통장을 새롭게 만드는 수고로움을 덜어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 개 정 안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2.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1회의 이체 거래로 보조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건의

제 목	빈집 정비(철거)시 현행 해체계획서 건축사·기술사 검토 의무 면제(완화)				
건의번호	105946	건의일	2023-05-04	진행상태	답변(일부수용)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법령	건축물관리법		
첨부파일	빈집 정비(철거)시 현행 해체계획서 건축사·기술사 검토 의무 면제(완화).hwpx[88 KB]				
건의내용	<규제내용> 2022. 2. 3. 「건축물 관리법」제30조가 일부 개정되고 '건축물 해체 허가를 득하고자 할 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법」 및 「기술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 해야한다' 는 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철거할 시 철거 비용 외에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이 새롭게 발생함. <문제점(불편사항)> ○ 우리군은 매년 빈집정비사업(민간보조)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철거)하고 있는데 물가상승(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에 해체계획서 검토비용이 더해져 철거 비용 중 자부담분이 급격히 증가하여 사업 신청자가 감소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포기하는 등 정비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음 ○ 또한, 법 개정이 철거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할 때 경제적 진입장벽이 만들어졌음. 결과적으로 사실상 경제적 취약계층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22년 건축사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은 100 ~ 180만원 정도 <개선의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할 시 현행 해체계획서 건축사·기술사 검토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 ※ 완화 시 법 개정 전 절차로 회귀 가능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건의-부처 일부수용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답변일자	2023-05-11	담당자연락처	044-201-4986
책 임 자	[국장] 건축정책관 이정희 [과장] 건축안전과장 김연희 [담당] 심상훈				
관련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답 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빈집 해체계획서 의무 면제에 관한 규제개선을 건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나.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시행하여 건축물 해체에 관한 안전을 강화하였으나, 건축물 해체 안전사고는 지속 발생되는 있는 상황입니다.

* (해체 안전 강화) 건축물 해체에 대한 허가·신고 도입, 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 도입, 해체공사감리 도입 등

○ 건축물 해체 안전사고는 해체공사장 이외의 인접 시설물 및 인접 이용자까지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바,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0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는 인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인근 이용자까지 많은 사상자가 발생

○ 이에 해체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은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단계부터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 법령을 마련하여 2022년 8월 4일 시행한 사항입니다.

○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도시와 농촌지역 구분에 기인하지 아니하며, 1층의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체계획이 부실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이 가능합니다.

* 2020년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도심지 내에서 발생하였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이 부실 잘못되고, 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농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 큼

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금년에 해체 신고 대상 중 해체계획서를 간소화하여 작성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시행 중('23.04~'23.12)이며 간소화된 해체계획서 양식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청취하여 마련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향후 우리부에서는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와 해체에 관한 전문가 및 허가권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여 현 제도의 개선 여부 및 개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건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심상훈주무관 (☎044-201-4986, oasises@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보도자료(규제개혁 추진)

23. 3. 31. 오전 5:31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news1

지방 > 전북

고창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23-03-30 14:25 송고

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고창군이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 기업규제 등 개선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창군은 기획예산실 대외협력팀에 규제개혁신고센터 상시창구를 운영하며 군민의 불편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군 홈페이지 원클릭 인포존을 설치하여 쉽고 빠르게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군은 매월 25일 규제혁신의 날을 운영하고 월 1회 부서별 군정 현안 중심의 규제사항을 발굴,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방규제혁신TF팀을 통해 검토,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혁신 공모전'도 진행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article_print.php?article_id=4999208 1/2